

자치단체별 어린이집 공공성 실태 보고서

전국 어린이집 현황
광역시·기초 자치단체 어린이집 공공성 평가

03	요약
07	취지
07	전국 어린이집 현황
11	광역시 자치단체 어린이집 공공성 평가
19	기초 자치단체 어린이집 공공성 평가
48	결론

차례

요약	3
취지	7
전국 어린이집 현황	8
광역시·자치단체 어린이집 공공성 평가	12
1. 광역·자치단체별 어린이집 현황	13
2. 광역·자치단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14
3. 광역·자치단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율	15
4. 광역·자치단체별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	18
기초 자치단체 어린이집 공공성 평가	20
1. 광역별 기초 자치단체 어린이집 현황 및 증가율(서울~제주)	21
2. 기초 자치단체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	47
결론	49

시설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아, 전국 보육 공공성 실태를 분석함

- 최근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를 비롯한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 비용 측면에서 보육의 공공성이 향상되어졌음. 그러나 보육서비스에서는 비용 부담 경감 뿐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함. 지금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신뢰를 얻어왔음. 따라서 부모들이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 지원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 즉, 시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본 보고서는 전국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고 자치단체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둬. 보육의 공공성을 시설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시설 공공성을 비교, 평가함. 단, 시설의 공공성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을 중심으로 판단함.
 - 평가자료 : 2009년~2011년 보육통계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2012년 3월말 기준 전국어린이집 설치현황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인구(0-5세)
 - 평가기준 : 2012년 3월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 2009년 이후 2012년 3월까지 국공립 시설 증가율 : 2009년 대비 2012년 3월 시설
-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이 중요한 기준이나, 최근 3년 간 각 지방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에 주목하고자 함.
- 이 평가는 2012년 3월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급변하는 보육시장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전국 어린이집 현황

- 보육 서비스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비용지원에 집중하고 시설의 공공성을 기하지 않는 현재의 보육정책은 서비스의 질 제고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2012년 3월 말 현재 어린이집은 총 4만 493개소로 9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국공립은 1992년 720개소→2012년 3월 2,156개소로 증가한 반면 전체 시설 대비 비중은 16.0%→5.32%로 감소했으며 수년간 제자리걸음으로 시설의 공공성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함.
 - 2012년 3월말 어린이집 시설 비중은 가정어린이집 52.31%>민간 37.35%>국공립 5.32%>법인 3.59% 순으로 2009년 이후 3년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국공립의 비중은 5.57%에서 5.32%

로 큰 변화가 없으며 법인시설의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전체적인 공적 시설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

- 0세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이 69.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공립은 2.15%에 불과하여 영아 보육의 공공성이 매우 낮은 반면, 시설 수는 많아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가정어린이집의 이용 아동의 연령대는 0-2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민간·국공립·법인 시설의 경우 영아보다는 3-5세 아동에 집중되어 있음.
- 민간 공급 서비스의 질과 가격수준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최소한 시장의 30% 수준은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준에서 볼 때 보육시설의 공공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영아보육에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광역 자치단체 어린이집 공공성 평가

- 2011년 말 기준 0-5세 아동 약 278만 명 중 47.95%인 133만 명가량 어린이집을 이용(이용률 47.95%)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정원대비 이용률이 높음.
 - 어린이집 이용률은 제주 지역이 72.73%로 가장 높고 서울이 41.57%로 가장 낮음.
- **광역 자치단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전국 평균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비중 5.32%, 아동 비중 10.91%)**
 - 국공립 시설 비중은 상위 서울 10.88%>부산 8.17%>강원 6.8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 대구 2.48%>광주 2.48%>대전이 1.74% 순으로 낮게 나타남.
 - 국공립 아동 비중은 상위 서울 23.96%>부산 15.58%>강원 12.9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 광주 4.55%>대구 3.41%>대전이 3.34% 순으로 낮게 나타남.
- **최근 3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율(전국 평균 : 시설 증가율 12.47%, 아동 증가율 13.38%)**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및 아동 증가율은 인천이, 증가개소는 경기도가 49개소로 가장 높으며 시설 및 아동 기준 증가율을 종합하면 인천>충남>전남·충북 순으로 높음. (인천 시설 증가율 22.62%/아동 증가율 26.27%, 충남 시설증가율 16.36%/아동증가율 21.71%, 전남 시설 증가율 19.35%/아동증가율 14.97%, 충북 시설증가율 20.93%/아동증가율 14.88%)
 - 제주도 1개소, 울산 2개소, 대구 3개소 증가에 불과하며 광주와 대전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1개소 씩 감소함. 제주, 광주, 대전은 국공립 비중이 낮음에도 증설 노력이 미미한 자치단체로 평가됨. (제주: 시설증가율 5.00%/아동증가율 3.32%, 광주: 시설증가율 -3.23%/아동증가율 -4.02%, 대전: 시설증가율 -3.45%/아동증가율 -4.00%)
 -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에서 상위를 차지한 서울과 부산, 강원외의 경우 증가율에 있어서는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강원 시설증가율 8.00%/아동증가율10.38% 10위, 서울 시설증가율

7.51%/아동증가율 7.22% 11위, 부산 시설증가율 5.88%/아동증가율 6.57% 13위)

- **국공립 비중과 증가율을 종합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상위 순위는 인천>전남>경기**
 - 서울은 국공립 비중 순위는 가장 높으나 증가율이 낮아 4위에 그침.
 - 공공성 하위는 제주 14위, 광주 15위, 대전 16위로 광주와 대전은 재정자립도가 중위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노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 강원도의 경우 1.30%p로 국공립 비중 감소폭이 가장 크고 민간 증가율이 7.75%, 가정어린이집 증가율은 무려 73.33%에 달함.

기초 자치단체 어린이집 공공성 평가

- **국공립 시설 비중 30% 이상인 기초 자치단체는 16곳으로 전체 7%에 불과**
 - 시설 비중 30% 이상 :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옹진군·강화군, 강원 화천군·고성군·태백시, 충북 단양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울릉군·봉화군·울진군·영덕군·고령군·청송군
- **국공립 아동 비중 30% 이상인 기초 자치단체는 29곳으로 전체 12.61%에 불과**
 - 아동 비중 30% 이상 : 서울 종로구·중구·성동구·동작구·마포구·강남구, 부산 중구·동구·서구·영도구, 인천 강화군·옹진군, 강원 고성군·태백시·화천군·정선군·인제군, 충북 단양군, 전북 진안군, 전남 보성군, 경북 울릉군·영양군·봉화군·울진군·영덕군·청도군·성주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 **울산·광주·대전, 모든 기초 자치단체가 전국 평균 5.32% 이하 시설 비중**
 - 16개의 지자체 내에서 전국평균(5.32%)이상의 국공립 시설 비중은 상위 서울(100%)>충북(83%)>부산(75%)>강원(67%)>경북(65%)>전남(59%)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울산·광주·대전은 0%로 나타남.
 - 즉, 서울의 경우 25개의 기초 자치단체가 모두 전국 평균 이상의 국공립 시설 비중을 갖고 있는 반면, 울산, 광주, 대전은 모든 기초 자치단체가 전국 평균 이하의 국공립 시설 비중을 나타냄.
- **충남 부여군, 전북 임실군, 전남 담양군·곡성군·강진군·함평군, 경북 군위군 등 무려 7곳의 국공립 시설 0개**
 - 이들 지역의 0-5세 영유아는 전남 담양군(1,935명), 곡성군(1,323명), 강진군(2,442명), 함평군(1,485명), 경북 군위군(673명), 충남 부여군(2,995명), 전북 임실군(1,397명)으로 이 지역 내의 영유아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음.
- **국공립 시설 증가율 상위 지역은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
- **기초 자치단체별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상위 1위 강원 화천군, 2위 인천 옹진군, 3위 전남 장성군**

결론

-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보육할 책임과 어린이집을 확보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은 지난 3년 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 시설 비중 5.32%, 아동비중 10.91%의 국공립 비중과 시설기준 12.47% 아동기준 13.38% 수준임에도 최근 3년(2009년~2012년 3월) 간, 총 4,943개의 어린이집이 증가했으며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39개소(4.84%) 증가에 불과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2000년 6.71%→2012년 3월 말 5.32%)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설립이 쉬운 가정어린이집이 급증(2000년 33.58%→2012년 3월 말 52.31%)하고 있어서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민간의존도가 높은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지방정부의 보육 시설 공공성 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도출됨
 - 각 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광역 자치단체 공공성 순위, 인천 1위, 전남 2위, 경기 3위로 나타나**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의 영아 돌봄 비중을 늘려야 함. 영아를 시설 보육을 통해 돌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민간운영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하는 기능을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국공립 영아 보육 비중이 지나치게 낮음.
 - 보육지원 확대에 의해 가정어린이집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야 함.
 -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비롯한 충분한 준비 없이 보육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에 등록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따라서 비용지원을 중심으로 한 보육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고가 필요함.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국공립 증설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어린이집 신설을 비롯한 보육재정에 대한 국고 비중을 늘려야 함.

보육료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 정부의 보육정책

● 현황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9년 기준 1.1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며 결혼과 출산 이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지며 보육비 부담 등의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보육곤란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현 정부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는 주요정책이 되지 못한 채,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은 보육료 지원 확충 등의 현금 지원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민간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보육정책은 비용은 공적으로 지출되지만 민간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공급되기 때문에 보육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공적 통제가 원활하지 못해 투자 대비 효과가 낮고 지원확대가 보육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보육비용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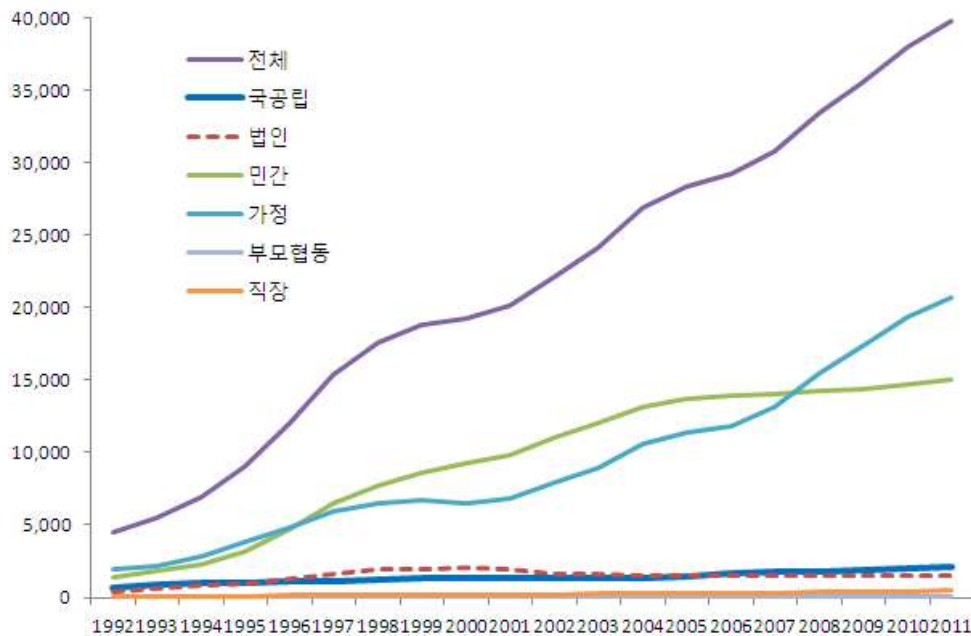
●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황을 분석하여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평가하고 보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 2009년~2011년 보육통계,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2012년 말 전국어린이집 설치현황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인구(0-5세)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분석함.
- 지역 아동들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공적 제공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자체별 아동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중을 분석함.
- 전국 어린이집 현황을 분석하여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정부 및 지자체가 얼마나 공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는지 분석함.
-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책임성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3년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 및 증가율 추이를 분석함.

어린이집 공공성 평가

1. 전국 어린이집 현황

- 2012년 3월 말 현재 어린이집은 총 4만 493개소로 9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아동인구(0-만4세)가 1990년 약 328만 명에서 2011년 약 232만 명으로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아동수 대비 시설 증가추세는 더욱 가파를 것임.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와 보육시설을 통한 아동 보육의 일반화, 정부의 보육 지원 정책의 확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시설의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국공립은 1992년 720개소에서 2012년 3월 2,156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시설 중 국공립의 비중은 16.0%에서 5.32%로 감소함. 2003년 5.5%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5%대를 유지하고 있음.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¹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2007년을 기점으로 민간어린이집의 증가추이가 완만해지고 가정어린이집이 급증하여 가정어린이집의 비중이 민간을 압도하게 되었음.
- 2007년에 영아기본보조금 도입을 중심으로 한 새로맞이플랜이 발표되면서 영아 보육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어린이집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된 것임. 2012년 3월 시행된(1월 발표) 0-2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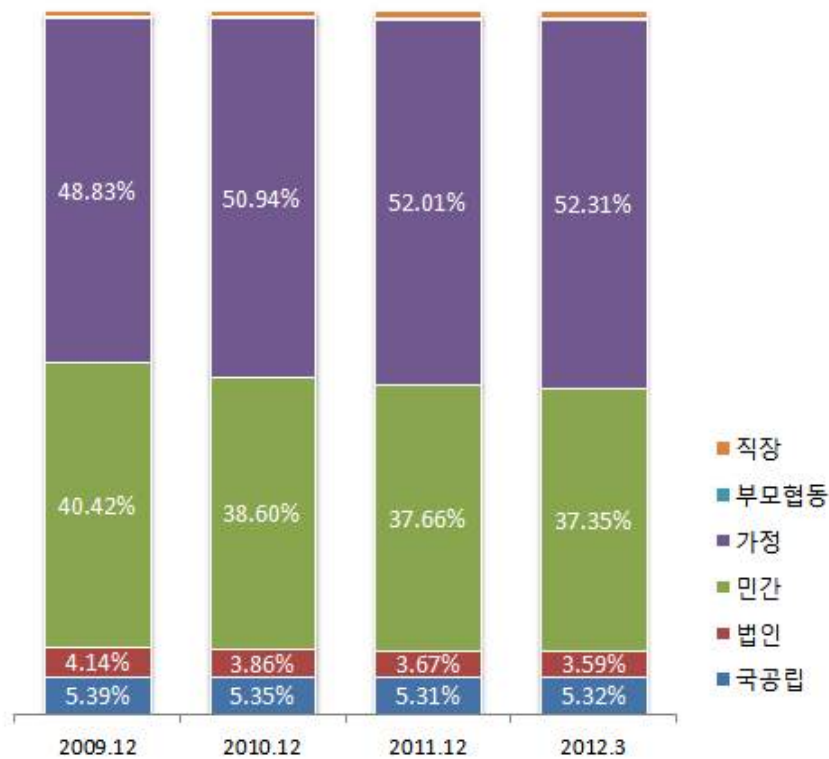


<그림1 > 어린이집 개소 변화 추이

1.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한 어린이집을 의미하며, 민간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법인 혹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중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을 의미한다. 법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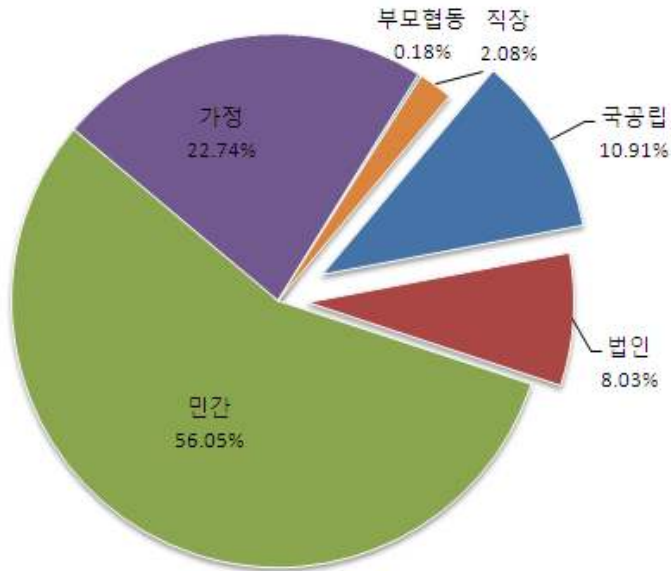
대한 보육료지원 확대에 의해 2012년 1-3월 기간 동안 가정보육시설이 458개가 증가한 것과 같이 정부의 보육정책에 따라 보육 시장의 공급주체가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함.

- 2012년 3월말 어린이집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이 전체의 52.31%를 차지하고 민간 37.35%, 국공립 5.32%, 법인 3.59% 순임. 2009년 이후 3년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국공립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고, 공적 시설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법인시설의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전체적인 공적 시설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평가됨. 이에 반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개소의 증가 뿐 아니라 비중 역시 증가추세(2009년 48.83%에서 2012년 3월 52.31%)에 있음.



<그림 2> 어린이집 유형별 비중 변화 추이

- 가정어린이집이 시설개소 면에서는 압도적이거나 보육아동수를 감안하면 민간어린이집이 56.15%로 압도적임. 가정어린이집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동기준으로는 22.87%를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국공립의 경우 10.61%를 차지함.



<그림 3>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아동 비중 (2011년 12말 기준)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이 69.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공립은 2.15%에 불과하여 영아 보육시설의 공공성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가정 어린이집의 이용 아동의 연령대는 0-2세에 집중되어 있으며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3-5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음. 국공립 및 법인시설의 경우 역시 영아보다는 3-5세 아동에 집중되어 있음. 국공립시설은 아동의 부모들에게 서비스의 질에 대한 비교기준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수행함. 그러나 영아보육의 경우 국공립시설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시설의 수가 많아 실질적인 서비스 질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



<그림 4> 어린이집 이용 아동 연령별 시설 유형 비중(2011년 12월말 기준)

- 소결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가책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질 좋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은 수년간 제자리걸음으로 시설의 공공성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최근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각종 비리가 적발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은 여전히 사회적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민간 공급 서비스의 질과 가격수준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최소한 시장의 30% 수준은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보육시설의 공공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영아보육에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영아보육의 경우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와 가정보육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영아를 담당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시급함.

한편, 보육 서비스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특히 규모가 작고 시설 설립이 용이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영아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의 확대에 따라 시설기준 52.3%, 아동기준 22.9%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급증함. 특히 0-1세 영아보육에서의 비중은 압도적임. 비용지원에 집중하고 시설의 공공성을 기하지 않는 현재의 보육정책은 서비스의 질 제고에 역행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갖게 함.

2. 광역 자치단체 어린이집 공공성 평가

- 본 보고서는 자치단체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데에 목적을 둬. 보육의 공공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육재정의 공공성임. 이는 총 보육 비용 중 정부와 부모의 부담 비율로 판단할 수 있음. 최근 보육료 지원의 확대로 인하여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률은 크게 낮아졌으나 보육종사자의 낮은 처우와 특별활동비를 비롯한 비공식적 비용의 부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 두 번째는 본 보고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즉 시설의 공공성임. 국공립어린이집은 표준적인 보육비용과 서비스의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수백명에 달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자 명단에서 확인되듯이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이 중요한 보육정책의 과제임이 분명함.
- 따라서 본 보고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시설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시설 공공성을 비교, 평가하고자 함. 시설의 공공성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을 중심으로 판단함. 법인시설의 경우 민간 및 가정시설에 비해 공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운영주체와 방법 및 지역에 따라 공적 기능에 있어 다양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 시설은 제외하고 국공립을 중심으로 평가함.
-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음.
 - 2012년 3월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
 - ①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의 비중 (이하 '시설비중')
 - ② 전체 보육 아동 중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비중 (이하 '아동비중')
 - 2009년 이후 2012년 3월까지 국공립 시설 증가율 : 2009년 대비 2012년 3월 시설
 - ① 2009년 ~ 2012년 3월 동안의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 증가율
 - ② 2009년 ~ 2012년 3월 동안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수 증가율

1) 광역 자치단체별 어린이집 현황

- 2011년 말 기준 0-5세 아동 약 278만명 중 47.95%인 133만명 가량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음. 이용율은 제주 지역이 72.73%로 가장 높고 서울이 41.57%로 가장 낮음. 제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타 지역에 높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2012년 3월 기준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재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의 비율은 72.93%(경북)~88.86%(서울)로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 광역 자치단체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

구분	0-5세 아동수(명)	어린이집 이용 ¹		정원대비 충족률(%) ²
		현원(명)	이용률(%)	
전체	2,777,209	1,331,714	47.95	81.37
서울	502,766	208,985	41.57	88.86
부산	156,472	66,835	42.71	81.34
대구	124,198	62,012	49.93	76.42
인천	158,758	71,016	44.73	87.07
광주	87,003	49,398	56.78	78.06
대전	89,215	44,393	49.76	82.17
울산	67,754	29,774	43.94	84.12
경기	748,040	342,655	45.81	83.19
강원	75,635	42,684	56.43	76.73
충북	87,291	47,882	54.85	79.41
충남	123,274	62,791	50.94	79.95
전북	97,233	55,557	57.14	74.98
전남	96,196	53,398	55.51	77.80
경북	136,529	71,107	52.08	72.93
경남	192,054	97,925	50.99	77.21
제주	34,791	25,302	72.73	77.46

1) 어린이집 이용율은 0-5세를 기준으로 함. 즉, 0-5세 인구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을 말함.

2) 정원대비 충족률은 연령구분 없이(6세 포함)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을 말함.

2) 광역 자치단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 2012년 3월을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은 2,156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중 5.32%에 해당됨.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중 국공립 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비중은 이보다 높은 10.91%임. 국공립 시설의 규모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시설비중보다 아동비중이 높게 나타남.
- 자치단체 중 국공립 시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10.88%인 서울시이고, 대전시가 1.74%로 가장 비중이 낮음. 대전시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의 비중이 전체 시설 중 4.62%(전국 평균 2.0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러나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일반적인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평가 순위에 반영하지 않음.
- 2012년 3월 기준 국공립의 시설비중과 아동비중 각각의 순위를 더하여 광역자치단체별 순위를 부여하면 서울이 1위, 부산 2위, 강원 3위이며, 대전이 최하위이며 대구와 광주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이 2.5%에 미치지 못하고 아동비중 역시 3~4% 수준으로 하위권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상하위 3개의 지자체는 시설비중으로 보나 아동비중으로 보나 같은 순위에 위치함. 단, 광주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78.23%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음.

<표 2 > 광역 자치단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구분	시설수 (개소)	정원(명)	현원(명)	충족률(%)	시설비중		아동비중		종합 순위 (A+B)/2
					비율(%)	순위 (A)	대비(%)	순위 (B)	
전체	2,156	160,292	147,004	91.71	5.32		10.91		
서울	673	56,039	52,901	94.40	10.88	1	23.96	1	1
부산	144	11,581	10,421	89.98	8.17	2	15.58	2	2
대구	39	2,444	2,038	83.39	2.48	14	3.41	15	14
인천	103	6,939	6,480	93.39	5.10	6	8.93	5	4
광주	30	2,774	2,170	78.23	2.48	15	4.55	14	14
대전	28	1,579	1,463	92.65	1.74	16	3.34	16	16
울산	31	2,122	2,053	96.75	3.70	11	6.70	10	10
경기	513	36,202	34,311	94.78	4.27	8	9.77	4	5
강원	81	6,360	5,478	86.13	6.80	3	12.95	3	3
충북	52	4,075	3,574	87.71	4.56	7	7.46	9	9
충남	64	4,043	3,661	90.55	3.32	12	5.64	12	12
전북	51	3,387	2,894	85.44	3.23	13	5.27	13	13
전남	74	5,053	4,078	80.70	6.28	4	7.71	8	5
경북	121	6,711	5,553	82.74	5.43	5	7.98	7	5
경남	131	9,529	8,653	90.81	3.78	9	8.88	6	8
제주	21	1,454	1,276	87.76	3.71	10	5.22	11	10

3) 광역 자치단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율

- 현재 시점에서 국공립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이외에 각 자치단체가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각 지자체가 충실히 수용하였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최근 3년(2009년 ~ 2012년 3월) 간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가율과 비중의 변화를 비교함.
- 최근 3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가개소는 경기도가 49 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 인천의 순임.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와 3년 전의 국공립 어린이집 수와 비중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노력을 평가하여야 함. 최근 3년간 국공립 시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인천시임. 인천시는 현재 시점에서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4위(시설비중 5.1%, 아동비중 8.9%)로 중상위 순위를 나타냈으나 국공립 시설의 증가율은 22.62%(84→103개)로 가장 높음. 아동대비 증가율도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충남이 시설대비 16.36%, 아동대비 21.71% 증가하여 종합순위 2위를 차지함. 다음으로 전남과 충북이 공동 3위를 차지함.

<표 3> 광역 지자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율

구분	증가개소	국공립 증가율 (%)				종합순위 (A+B)/2
		시설기준	순위 (A)	아동기준	순위 (B)	
전체	239	12.47		13.38		
서울	47	7.51	11	7.22	12	11
부산	8	5.88	13	6.57	13	13
대구	3	8.33	9	13.22	8	9
인천	19	22.62	1	26.27	1	1
광주	-1	-3.23	15	-4.02	16	15
대전	-1	-3.45	16	-4.00	15	15
울산	2	6.90	12	9.55	11	11
경기	49	10.56	8	26.00	2	5
강원	6	8.00	10	10.38	10	10
충북	9	20.93	2	14.88	7	3
충남	9	16.36	4	21.71	3	2
전북	6	13.33	6	17.83	4	5
전남	12	19.35	3	14.97	6	3
경북	12	11.01	7	11.24	9	8
경남	17	14.91	5	16.85	5	5
제주	1	5.00	14	3.32	14	14

- 광주와 대전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수가 한 개소씩 감소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에 대한 노력을 가장 기울이지 않은 자치단체로 평가됨. 대전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도 92.65%로 높게 나타나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에 대한 수요가 충분함에도 오히려 감소하였음.
- 제주도 1개소, 울산 2개소, 대구는 3개소가 늘어 하위권을 구성함. 광주와 대전, 대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역시 최하위권임. 따라서 국공립 비중이 낮음에도 증설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자치단체로 평가됨. 울산과 제주 역시 국공립 비중에서 10위를 차지한 자치단체로서 비중과 증가율에서 모두 하위로 평가됨.
-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에서 상위를 차지한 서울과 부산, 강원도의 경우 증가율에 있어서는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서울 11위, 부산 13위, 강원 10위) 이는 이들 지자체가 3년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던 반면,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에는 제한적인 성과를 나타냈음을 의미함.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이 이미 높은 지자체의 경우 국공립 추가 신설에 대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저항이나 지역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서울과 부산에서 민간 어린이집이 시설수에서 다소 감소하였을 뿐 아동수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가정 어린이집은 17%를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서울과 부산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필요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음. 강원도의 경우 1.30%p로 국공립 비중 감소폭이 가장 크고 민간 증가율이 7.75%, 가정어린이집 증가율은 무려 73.33%에 달함.

<표 4> 국공립 비중 변화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증가율

구분	국공립비중변화(%p)		민간 증가율 (%)		가정 증가율 (%)	
	시설기준	이동기준	시설기준	아동기준	시설기준	아동기준
전체	-0.07	-0.13	5.27	11.77	22.01	29.39
서울	-0.13	-1.51	-0.48	10.08	17.39	30.17
부산	-0.04	0.03	-0.36	2.91	17.40	23.74
대구	0.08	0.28	2.85	5.66	8.22	8.45
인천	0.37	0.17	4.24	21.49	20.76	28.81
광주	-0.21	-0.40	8.53	8.41	3.27	1.49
대전	-0.31	-0.66	3.64	11.59	19.30	25.13
울산	-0.69	-1.08	14.40	23.71	53.13	65.49
경기	0.15	0.18	4.35	20.00	7.53	30.04
강원	-1.30	-0.26	7.75	5.97	73.33	69.28
충북	0.41	0.15	1.58	9.59	17.32	30.83
충남	-0.42	-0.11	16.11	20.26	52.19	65.55
전북	0.24	0.86	3.44	-3.22	7.99	5.29
전남	0.72	0.79	2.61	3.60	9.30	9.80
경북	-0.53	0.14	8.26	4.45	42.26	38.47
경남	-0.20	0.09	6.33	9.31	33.05	36.45
제주	-0.27	-0.01	8.87	6.24	30.51	18.66

-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 감소와 가정어린이집의 급증은 0~2세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이 가져온 결과임.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이 극히 제한적인 영아 보육 영역에서 가정형을 중심으로 한 민간 운영 어린이집이 급증하여 전체적인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은 것임. 따라서 서비스의 공공성 측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어 비용부담의 공공성은 높아졌으나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은 이와 역행하고 있음. 특히 연령별로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에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0~2세의 영아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함.
- 자치단체 평가에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 변화가 중요한 평가기준이지만 가정 어린이집의 급증은 보육료 지원이라는 정부 정책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바 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 그러나 자치단체가 영아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임.

4) 광역 자치단체별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순위

-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과 최근 3년 간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가율을 종합하여 광역 자치단체별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평가하면 아래와 같음. 최종 순위는 비중 순위와 증가율 순위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함.
- 순위는 인천이 1위이며 전남 2위, 경기도가 3위를 나타냄. 서울의 경우 국공립 비중 순위는 가장 높았으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4위에 그침. 이 중 전남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임에도 국공립 증가율 중상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하지만 전남의 경우 전 지역의 고른 증가가 아닌 몇몇 기초 자치단체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임으로 인한 효과로 이는 뒤의 기초 자치단체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음.
- 공공성 하위 자치단체는 대전이 최하위이며 광주와 제주가 각기 15, 14위를 차지함. 대전과 광주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각기 1개소씩 감소하였고 제주는 1개소 증가에 그친 결과임. 특히 광주와 대전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중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평가는 지역간 차이 즉, 대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을 증설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님.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같은 보육 수요의 지역간 차이도 고려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전국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과 증가율을 바탕으로 한 본 평가는 자치단체의 보육 서비스 공공성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로서의 의미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 제고 노력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이나 증가율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함. 따라서 상위 혹은 하위 자치단체 공히 보육 전달체계 공공성 확보에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최근 불거진 민간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및 보조금 편취 등 운영비리는 자치단체의 어린이집 관리감독이 부실함을 반증하는 것임.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설 뿐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역시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엄격히 하고 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보육료 지원 확대에 의해 지방정부의 보육 재정이 고갈될 우려에 있음.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보육시설 신설이나 보육료 지원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지역간 서비스의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보편적 지원 정책으로서 보육료 지원 및 국공립 시설 증설 예산에서의 중앙정부 부담을 대폭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5> 광역자치단체 보육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 결과

	국공립 비중 순위 (A)	증가율 순위 (B)	최종 순위 (A+B)/2	재정자립도	
인천	4	1	1	3	(69.3)
전남	5	3	2	16	(20.7)
경기	5	5	3	2	(72.5)
서울	1	11	4	1	(90.3)
충북	9	3	4	11	(32.7)
강원	3	10	6	13	(27.5)
경북	5	8	6	12	(28.1)
경남	8	5	6	9	(42.6)
충남	12	2	9	10	(35.4)
부산	2	13	10	6	(56.4)
전북	13	5	11	15	(24.5)
울산	10	11	12	4	(69.1)
대구	14	9	13	7	(53.5)
제주	10	14	14	14	(25.1)
광주	14	15	15	8	(47.5)
대전	16	15	16	5	(57.2)

3. 기초 자치단체 어린이집 공공성 평가

- 앞서 광역 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 및 증가율을 중심으로 시설 공공성을 비교하여 광역 자치단체별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을 평가하였음. 이는 광역 내 기초 자치단체의 각각의 비중 및 증가율의 평균치로 지역 내 편차 등이 고려되지 않은 평가임.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앞서 고려되지 않은 지역 내 기초 자치단체 각각의 비중 및 증가율을 중심으로 16개 광역 별 기초 자치단체의 시설 공공성을 국공립어린이집 비중과 증가율을 표로 구성하여 비교, 평가함.
-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광역 자치단체와 동일하며 아래와 같음.
 - 2012년 3월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
 - ①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의 비중 (이하 '시설비중')
 - ② 전체 보육 아동 중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비중 (이하 '아동비중')
 - 2009년 이후 2012년 3월까지 국공립 시설 증가율 : 2009년 대비 2012년 3월 시설
 - ① 2009년 ~ 2012년 3월 동안의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 증가율
 - ② 2009년 ~ 2012년 3월 동안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수 증가율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등에 따라서 보육 시장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국공립 비중 및 증가율을 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230개 기초 자치단체의 지역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앞서 광역과 같이 전체 순위를 부여하지는 않음.
- 그러나 1) 2012년 3월 기준 국공립 시설비중과 아동비중의 각각의 순위를 더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의 순위를 부여하고 2) 2009년 이후 2012년 3월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 증가율과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수 증가율 각각의 순위를 더하여 국공립시설 증가율 순위를 부여한 후 3) 비중 순위와 증가율 순위의 산술평균을 산출하여 전국 상위 10%와 하위 10% 기초 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 나타냄.
 - 전국 상위 10% 기초 자치단체 표기방법 : **짧은 파란색 글자** + 회색바탕
 - 전국 하위 10% 기초 자치단체 표기방법 : **짧은 빨간색 글자**

서울

- 종로구·중구, 국공립 시설 및 아동비중 모두 30% 이상 공적 영역에서 제공

서울의 국공립 시설 비중은 종로구 36.76%>중구 32.08%>성동구 21.12%의 순으로 높았으며 노원구가 5.66%로 가장 낮았음. 국공립 아동 비중은 중구 51.19%>종로구 43.56%>강남구 41.45%의 순으로 높았으며 은평구가 11.46%로 가장 낮았음.

서울에서 시설 비중 30% 이상은 종로구, 중구 2곳이며 아동비중 30% 이상은 중구, 종로구, 강남구,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6곳으로 종로구와 중구는 시설비중과 아동비중 모두 민간 공급 서비스의 질과 가격수준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인 30%를 공적 영역에서 제공하고 있음.

서울은 25개 기초 자치단체가 모두 전국 평균 5.32% 이상의 시설 비중을 나타냄.

- 국공립 시설·아동 기준 증가율은 은평구가 가장 높으며 3년간 국공립 시설 증가율 0%인 곳은 9곳

최근 3년 간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개소는 구로구 6개소, 송파구 5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이를 시설 기준 증가율로 평가하면 은평구>구로구>송파구, 아동기준 증가율은 은평구>구로구>동대문구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은평구가 시설 기준과 아동 기준 모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반면 광진, 중랑, 강북, 도봉, 서대문,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9곳은 3년 간 증가율은 0%로 나타남. 이들 지역은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서대문을 제외하고는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었음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강남구,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에서 전체 기초 자치단체 상위 10%에 속함.

<표 6> 서울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및 증가율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국공립 증가율		
	시설수 (개소)	시설 비중 (%)	아동 비중 (%)	증가개소 (개소)	시설 기준 (%)	아동 기준 (%)
서울	673	10.88	23.96	47	7.51	7.22
종로	25	▶ 36.76	43.56	1	4.17	2.74
중구	17	32.08	▶ 51.19	1	6.25	5.22
용산	18	14.29	28.54	1	5.88	9.59
성동	34	21.12	37.75	2	6.25	0.42
광진	21	10.19	22.98	0	0.00	4.91
동대문	30	13.33	26.56	4	15.38	14.77
중랑	24	9.16	23.49	0	0.00	2.80
성북	30	9.40	20.89	3	11.11	10.36
강북	23	10.95	18.19	0	0.00	-0.95
도봉	20	6.64	16.03	0	0.00	5.33
노원	30	▶ 5.66	21.38	2	7.14	7.33
은평	22	6.81	▶ 11.46	4	▶ 22.22	▶ 18.09
서대문	24	14.63	25.79	0	0.00	2.55
마포	36	16.90	35.66	3	9.09	1.54
양천	30	9.46	24.85	4	15.38	12.16
강서	35	9.02	18.39	0	0.00	4.08
구로	34	10.06	19.78	6	21.43	17.25
금천	14	6.90	14.45	0	0.00	9.34
영등포	23	9.62	19.23	0	0.00	4.47
동작	29	13.74	32.25	0	0.00	1.51
관악	35	12.96	28.03	2	0.00	6.49
서초	22	12.64	25.91	2	10.00	7.57
강남	39	20.10	41.45	4	11.43	11.99
송파	36	9.47	23.49	5	16.13	13.95
강동	22	7.12	16.97	3	15.79	9.29

1) ▶ 광역 내 최고 ▷ 광역 내 최저 2) 파란색 : 전국 상위 10%, 빨간색 : 전국 하위 10%

부산

- 중구·영도구·서구·동구는 국공립 아동비중 30% 이상 공적 영역에서 제공

부산의 국공립 시설 비중은 중구 28.57%>동구 22.50%>영도구>22.22% 순으로 높았으며 수영구가 2.67%로 가장 낮았음. 국공립 아동비중은 중구 37.64%>영도구 36.75%>서구 32.83% 순으로 높았으며 수영구가 5.51%로 가장 낮았음.

부산 지역에 시설 비중 30% 이상인 지역은 없으며 아동비중 30% 이상인 지역은 중구, 영도구, 서구, 동구의 4곳임.

부산은 16개 기초 자치단체 중 12곳이 전국 평균 5.32% 이상의 시설 비중을 4곳이 평균 이하의 시설 비중을 나타냄.

<표 7> 부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및 증가율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국공립 증가율		
	시설수 (개소)	시설 비중 (%)	아동 비중 (%)	증가개소 (개소)	시설 기준 (%)	아동 기준 (%)
부산	144	8.17	15.58	8	5.88	6.57
중구	4	▶ 28.57	▶ 37.64	0	0.00	10.67
서구	9	21.43	32.83	0	0.00	-0.17
동구	9	22.50	32.64	0	0.00	3.02
영도구	12	22.22	36.75	0	0.00	-1.43
부산진구	16	10.60	17.44	1	6.67	3.63
동래구	10	8.70	11.32	1	11.11	1.62
남구	13	9.63	22.26	1	8.33	13.48
북구	8	4.12	7.17	0	0.00	-6.57
해운대구	13	5.31	11.28	2	18.18	10.31
사하구	17	8.72	18.74	0	0.00	4.32
금정구	5	4.07	14.24	0	0.00	13.00
강서구	4	10.26	13.07	1	33.33	39.63
연제구	7	7.87	10.88	0	0.00	6.21
수영구	2	▶ 2.67	▶ 5.51	0	0.00	8.55
사상구	8	5.33	12.60	0	0.00	-4.50
기장군	7	6.93	10.07	2	▶ 40.00	▶ 77.45

1) ▶ 광역 내 최고 ▶ 광역 내 최저 2) 파란색 : 전국 상위 10%, 빨간색 : 전국 하위 10%

- 국공립 시설·아동 기준 증가율은 기장군이 가장 높으며 3년간 국공립 시설 증가율 0%인 곳은 10곳

최근 3년 간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개소는 해운대구, 기장군이 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시설 기준 증가율로 평가하면 기장군>강서구>해운대구, 이동기준 증가율은 기장군>강서구>남구 순으로 높게 나타나 기장군이 시설기준과 아동 기준 모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강서구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 증가하여 시설기준 33.33%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강서구가 부산 지역에서 가장 적은 39개소(국공립 4개소)의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또한 부산지역의 국공립 증가개소는 8개에 불과하며 16개 기초 자치단체 중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등 10개 지역의 증가율은 0%임. 이들 10개 지역은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의 증가율이 없거나 낮았으며 연제구, 수영구, 동구, 사하구, 금정구는 가정 어린이집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북구,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에서 전체 기초 자치단체 하위 10%에 속함

대구

- 대구,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전국 하위권임에도 증설 노력 없이 시설 3개소 증가에 그쳐

대구의 국공립 시설 비중은 중구가 5.41%로 가장 높았으나 전국 평균 5.32%를 겨우 넘는 수준이며, 북구가 1.39%로 가장 낮음. 아동비중은 8개 기초 자치단체가 모두 전국 평균 10.91%보다 낮은 가운데 중구가 7.87%로 높고 남구가 1.27%로 가장 낮음. 중구를 제외한 7개 지역은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의 시설 비중을 나타냄.

최근 3년 간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 개소는 동구 2개소, 달성군 1개소 증가를 제외하면 중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6개 지역은 시설 증가 없음. 대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이 전국 하위권이었으며 이와 같이 국공립 비중이 낮음에도 증설 노력 또한 기울이지 않은 자치단체로 평가됨.

- 남구·북구·수성구,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에서 전체 기초 자치단체 하위 10%에 속함

<표 8> 대구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및 증가율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국공립 증가율		
	시설수 (개소)	시설 비중 (%)	아동 비중 (%)	증가개소 (개소)	시설 기준 (%)	아동 기준 (%)
대구	39	2.48	3.41	3	8.33	13.22
중구	2	▶5.41	▶7.87	0	0.00	8.18
동구	9	4.64	3.68	2	▶28.57	22.31
서구	6	4.26	6.67	0	0.00	-2.67
남구	1	1.49	1.27	0	0.00	10.81
북구	5	1.39	1.34	0	0.00	-20.00
수성구	3	1.40	2.27	0	0.00	6.15
달서구	7	1.65	3.30	0	0.00	▶48.35
달성군	6	4.55	6.53	1	20.00	16.01

1) ▶광역 내 최고 ▷광역 내 최저 2) 파란색 : 전국 상위 10%, 빨간색 : 전국 하위 10%

인천

- **강화군·옹진군 국공립 시설 및 아동비중 모두 30% 이상 공적 영역에서 제공**

인천의 국공립 시설 비중은 옹진군 37.50%>강화군 31.58%>동구 12.50% 순으로 높았으며 서구가 2.26%로 가장 낮음. 아동비중은 강화군 44.90%>옹진군 41.32%>동구 27.17% 순으로 높았으며 서구가 4.70%로 가장 낮음.

인천에서 강화군, 옹진군 2곳은 시설 비중과 아동비중에서 모두 30% 이상을 나타냄. 시설 및 아동 비중에서 10개 기초 자치단체가 강화군, 옹진군이 상위권을 중구, 동구가 중위권을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하위권을 형성하는 지역 내 격차를 보임. 10개 기초 자치단체 중 6곳이 전국 평균 5.32% 이상의 시설 비중을 4곳이 평균 이하의 시설 비중을 나타냄.

최근 3년 간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개소는 남동구가 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기준 증가율은 옹진군>남동구>중구·부평구, 아동기준 증가율은 옹진군>남동구>남구 순으로 높게 나타나 옹진군이 시설 및 아동 기준 모두에서 가장 높았음. 옹진군은 1개의 시설 증가로 50%의 큰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옹진군의 전체 어린이집이 8개소에 불과하기 때문임.

반면, 동구와 연수구는 인천지역에서 유일하게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증가분이 없는데, 동구의 가정어린이집 증가율은 131.25%로 나타나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이 역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중구·옹진군,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에서 전체 기초 자치단체 상위 10%에 속함**

이는 전체 어린이집 및 국공립 어린이집의 개소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중 및 증가율이 높게 평가된 결과임.

<표 9> 인천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및 증가율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국공립 증가율		
	시설수 (개소)	시설 비중 (%)	아동 비중 (%)	증가개소 (개소)	시설 기준 (%)	아동 기준 (%)
인천	103	5.10	8.93	19	22.62	26.27
중구	11	12.36	21.59	3	37.50	25.64
동구	8	12.50	27.17	0	▷ 0.00	6.24
남구	17	6.77	11.62	2	13.33	39.48
연수구	8	4.21	11.12	0	▷ 0.00	7.65
남동구	19	5.52	7.45	6	46.15	52.27
부평구	11	2.80	5.58	3	37.50	30.22
계양구	11	4.20	6.23	1	10.00	26.86
서구	9	▷ 2.26	▷ 4.70	2	28.57	20.94
강화군	6	31.58	▷ 44.90	1	20.00	2.27
옹진군	3	▷ 37.50	41.32	1	▷ 50.00	▷ 75.00

1) ▶ 광역 내 최고 ▷ 광역 내 최저 2) 파란색 : 전국 상위 10%, 빨간색 : 전국 하위 10%

광주

- **광주,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전국 하위권임에도 국공립 시설 오히려 감소**

광주의 국공립 시설 비중은 동구가 4.44%로 가장 높으나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임. 광주의 5개 기초 자치단체 모두 전국 평균 5.32%를 밑돌고 있으며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구 8.64%로 이 역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준임.

최근 3년 간 국공립 어린이집은 북구와 광산구가 한 개소 씩 감소했으며 서구에 한 개소 증가한 것이 유일하며 나머지 동구와 남구의 시설 증가는 0임.

광주 지역 민간어린이집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북구를 제외하고는 가정어린이집 또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나 국공립어린이집 증설 노력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음.

- **남구·북구·광산구,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에서 전체 기초 자치단체 하위 10%에 속함**

<표 10> 광주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및 증가율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국공립 증가율		
	시설수 (개소)	시설 비중 (%)	아동 비중 (%)	증가개소 (개소)	시설 기준 (%)	아동 기준 (%)
광주	30	2.48	4.55	-1	-3.23	-4.02
동구	2	▶4.44	4.74	0	0.00	0.00
서구	10	4.05	▶8.64	1	11.11	-1.76
남구	2	1.47	3.23	0	0.00	-8.42
북구	12	3.63	6.01	-1	-7.69	-1.10
광산구	4	0.88	1.98	-1	-20.00	-12.68

1) ▶광역시 내 최고 ▷광역시 내 최저 2) 파란색 : 전국 상위 10%, 빨간색 : 전국 하위 10%

대전

- 대전,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전국 최하위에도 국공립 시설 감소

대전 지역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및 증가율의 광역 평가에서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대전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황과 최근 3년 간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가율은 <표12>와 같음. 대전 내 기초 자치단체 중 대덕구가 시설 비중 4.52%, 아동 비중 8.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5개 기초 자치단체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임.

최근 3년 간 국공립 어린이집 대전 지역의 국공립 시설 증가분은 없으며 중구의 경우 오히려 한 개소 감소함.

대전 지역 내 모든 기초 자치단체의 가정어린이집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중구와 대덕구를 제외하고는 민간어린이집 또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증설 노력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음.

- 대덕구를 제외한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에서 전체 기초 자치단체 하위 10%에 속함

<표 11> 대전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및 증가율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국공립 증가율		
	시설수 (개소)	시설 비중 (%)	아동 비중 (%)	증가개소 (개소)	시설 기준 (%)	아동 기준 (%)
대전	28	1.74	3.34	-1	-3.45	-4.00
동구	5	2.20	3.72	0	0.00	-1.02
중구	4	1.93	2.46	-1	-20.00	-14.74
서구	9	1.67	3.64	0	0.00	-3.81
유성구	1	0.23	0.38	0	0.00	0.00
대덕구	9	▶4.52	▶8.40	0	0.00	-2.20

1) ▶광역 내 최고 ▷광역 내 최저 2) 파란색 : 전국 상위 10%, 빨간색 : 전국 하위 10%

울산

- 울산 5개 기초 자치단체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의 국공립 비중에도 국공립 시설 증가 없어

울산의 5개 기초 자치단체는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의 시설/아동 대비 비중을 나타냈으며 남구와 북구에서 한 개소씩 증가한 것 외에는 시설 증가 없음. 북구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 증가하여 시설기준 33.3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대비 비중은 1.85%에 불과함.

울산 역시 모든 자치단체에서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모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증설 노력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음.

<표 12> 울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및 증가율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국공립 증가율		
	시설수 (개소)	시설 비중 (%)	아동 비중 (%)	증가개소 (개소)	시설 기준 (%)	아동 기준 (%)
울산	31	3.70%	6.70%	2	6.90%	9.55%
중구	5	4.46%	6.26%	0	0.00%	2.73%
남구	10	4.50%	8.31%	1	11.11%	22.41%
동구	5	3.70%	7.68%	0	0.00%	2.27%
북구	4	1.85%	2.81%	1	▶33.33%	▶22.58%
울주군	7	▶4.58%	▶8.49%	0	0.00%	1.61%

1) ▶광역시 내 최고 ▷광역시 내 최저 2) 파란색 : 전국 상위 10%, 빨간색 : 전국 하위 10%

경기도

- 31개 경기도 기초 자치단체 중 양평군이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및 증가율 가장 높아

경기도의 국공립 시설 비중은 양평군 18.75%>연천군 16.22%>과천시 15.09% 순으로 높았으며 여주군이 1.45%로 가장 낮음. 아동 비중은 양평군 28.27%>연천군 27.15%>과천시 24.82% 순으로 높았으며 여주군이 2.75%로 가장 낮음.

경기도에서 시설 및 아동 비중 30%인 기초 자치단체는 없으며 31개 기초 자치단체 중 13곳이 전국 평균 5.32% 이상의 시설 비중을, 18곳은 전국 평균 이하의 시설 비중을 나타내어 지역 내 격차가 존재함.

- 국공립 시설·아동 기준 증가율은 오산시가 가장 높으며 3년간 국공립 시설 증가율 0%인 곳은 7곳

최근 3년 간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개소는 수원시, 오산시가 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남양주시, 용인시가 8개소로 뒤를 이음. 이를 시설 기준 증가율로 평가하면 오산시>파주시>김포시>남양주시, 아동기준 증가율은 오산시>남양주시>파주시>김포시 순으로 높게 나타남. 오산시는 9개소가 증가하여 시설 기준 90.00%, 아동 기준 103.06%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경기 지역이 대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한 반면, 구리시, 가평군, 연천군, 평택시, 안성시, 여주군 7곳의 국공립 시설 증가율은 0임. 이 중 구리시, 가평군은 가정어린이집은 증가했으며 연천군, 평택시, 안성시, 여주군의 경우에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었음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노력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음.

- 오산시·김포시·양평군,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에서 전체 기초 자치단체 상위 10%에 속함

<표 13> 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및 증가율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국공립 증가율		
	시설수 (개소)	시설 비중 (%)	아동 비중 (%)	증가개소 (개소)	시설 기준 (%)	아동 기준 (%)
경기	513	4.27	9.77	49	10.56	26.00
고양시	37	3.51	8.65	6	19.35	42.33
의정부시	12	2.04	8.06	1	9.09	17.25
남양주시	23	3.52	5.66	8	53.33	88.89
파주시	15	2.91	5.51	7	87.50	72.04
구리시	7	4.58	10.09	0	▷ 0.00	6.31
포천시	15	9.55	16.16	2	15.38	8.55
양주시	15	4.92	10.23	1	7.14	7.64
동두천시	8	6.25	14.44	1	14.29	9.85
가평군	4	10.81	14.49	0	▷ 0.00	11.79
연천군	6	16.22	27.15	0	▷ 0.00	16.54
수원시	29	2.58	6.66	9	45.00	32.54
성남시	47	7.07	20.94	6	14.63	18.80
안양시	27	5.27	13.84	2	8.00	11.15
부천시	28	4.62	8.70	1	3.70	2.44
광명시	21	5.93	14.21	4	23.53	20.09
평택시	16	4.18	8.49	0	▷ 0.00	10.54
안산시	20	2.72	8.82	2	11.11	7.47
과천시	8	15.09	24.82	1	14.29	15.84
오산시	19	7.92	18.73	9	▶ 90.00	▶ 103.06
시흥시	20	4.66	8.18	1	5.26	13.75
군포시	17	6.34	14.59	2	13.33	20.36
의왕시	9	6.77	14.68	2	28.57	37.39
하남시	6	3.97	9.04	0	▷ 0.00	7.26
용인시	27	2.64	5.09	8	42.11	60.09
이천시	10	5.88	9.45	1	11.11	30.42
안성시	8	3.23	6.85	0	▷ 0.00	4.33
김포시	17	7.02	13.38	7	70.00	60.20
화성시	23	3.65	6.20	6	35.29	56.73
광주시	9	2.81	7.23	1	12.50	35.50
여주군	1	▷ 1.45	▷ 2.75	0	▷ 0.00	14.49
양평군	9	▶ 18.75	▶ 28.27	2	28.57	59.54

1) ▶ 광역 내 최고 ▷ 광역 내 최저 2) 파란색 : 전국 상위 10%, 빨간색 : 전국 하위 10%

강원

- 고성군·태백시·화천군, 국공립 시설 및 아동비중 모두 30% 이상 공적 영역에서 제공

강원의 국공립 시설 비중은 고성군이 46.15%>태백시 45.45%>화천군 30.00%의 순으로 높았으며 강릉시가 2.23%로 가장 낮음. 아동 비중은 역시 고성군이 56.49%>태백시 48.23%>화천군 39.14%의 순으로 높았으며 역시 강릉시가 3.35%로 가장 낮음.

강원 지역의 시설 비중 30% 이상인 지역은 고성군, 태백시, 화천군 3곳이며 아동비중 30% 이상인 지역은 고성군, 태백시, 화천군, 정선군, 인제군 5곳으로 고성군, 태백시, 화천군 3곳은 시설비중과 아동비중 모두에서 민간 공급 서비스의 질과 가격수준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인 30%를 공적 영역에서 제공하고 있음.

강원은 18개 기초 자치단체 중 12곳이 전국 평균 5.32% 이상의 시설 비중을 6곳이 평균 이하의 시설 비중을 나타냄.

- 원주시, 삼척시, 화천군 3곳만이 국공립 시설 증가했으며 춘천시 1개소 감소해

강원 지역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높은 편이나 증가율에 있어서는 하위권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3년 간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개소는 총 6개에 불과하며 화천군이 3개소 증가해 100% 증가율, 원주시가 3개소 증가해 25% 증가율, 삼척시가 1개소 증가해 14.29% 증가율을 나타냄. 그 외 나머지 지역은 증가분이 없었으며 춘천시의 경우 오히려 1개소 감소(-12.50% 증가율)함.

평창군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높으나 국공립 시설 증가율은 0인 반면, 정원 및 현원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아동 증가율이 55.67%로 나타남.

- 화천군,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에서 전체 기초 자치단체 상위 10%에 속함

이는 전체 어린이집 및 국공립 어린이집의 개소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중 및 증가율이 높게 평가된 결과임.

<표 14> 강원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및 증가율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국공립 증가율		
	시설수 (개소)	시설 비중 (%)	아동 비중 (%)	증가개소 (개소)	시설 기준 (%)	아동 기준 (%)
강원	81	6.80	12.95	6	8.00	10.38
춘천시	7	2.89	9.23	-1	-12.50	3.50
원주시	15	4.24	12.04	3	25.00	24.17
강릉시	4	▶ 2.23	▶ 3.35	0	0.00	-3.62
동해시	2	2.82	5.59	0	0.00	7.91
태백시	10	45.45	48.23	0	0.00	1.78
속초시	3	4.62	8.64	0	0.00	-2.64
삼척시	8	18.60	24.50	1	14.29	3.53
홍천군	3	6.67	9.86	0	0.00	22.14
횡성군	1	3.70	9.53	0	0.00	12.64
영월군	1	6.67	11.85	0	0.00	0.00
평창군	3	16.67	18.28	0	0.00	55.67
정선군	2	20.00	36.90	0	0.00	6.50
철원군	2	7.69	9.02	0	0.00	4.23
화천군	6	30.00	39.14	3	▶ 100.00	▶ 81.56
양구군	1	7.69	11.21	0	0.00	11.94
인제군	5	27.78	34.35	0	0.00	-5.05
고성군	6	▶ 46.15	▶ 56.49	0	0.00	1.71
양양군	2	18.18	18.86	0	0.00	7.79

1) ▶ 광역 내 최고 ▷ 광역 내 최저 2) 파란색 : 전국 상위 10%, 빨간색 : 전국 하위 10%

충북

- 단양군 국공립 시설 및 아동비중 모두 30% 이상 공적 영역에서 제공

충북의 국공립 시설 비중은 단양군 33.33%>영동군 13.33%>제천시 10.61% 순으로 높았으며 청원군이 0.84%로 가장 낮음. 아동 비중은 단양군 34.54%>제천시 21.17%>괴산군 16.93%로 높았으며 청원군이 1.51%로 가장 낮음.

충북은 청주시, 청원군 2곳을 제외한 나머지 10곳 모두 전국 평균 5.32% 이상의 시설 비중을 나타냄.

- 절반인 6곳의 시설 증가율 0%이며 나머지 절반 지역의 높은 증가율로 인해서 평균 증가율은 상위권

시설기준 증가율은 음성군 3개소 증가, 증평군 1개소 증가로 10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기존 국공립 시설 개소가 적음에 기인함. 진천군이 1개소 증가하여 50%의 시설 증가율을 보임. 청원군은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현원 92명) 신설되었음. 반면,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6곳의 국공립 시설 증가는 0임.

- 화천군,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에서 전체 기초 자치단체 상위 10%에 속함

이는 전체 어린이집 및 국공립 어린이집의 개소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게 평가된 결과임.

<표 15> 충북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및 증가율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국공립 증가율		
	시설수 (개소)	시설 비중 (%)	아동 비중 (%)	증가개소 (개소)	시설 기준 (%)	아동 기준 (%)
충북	52	4.56	7.46	9	20.93	14.88
청주시	13	2.06	3.56	2	18.18	13.74
충주시	9	7.09	8.66	1	12.50	0.63
제천시	7	10.61	21.17	0	0.00	-4.70
청원군	1	▶0.84	▶1.51	1	신설	신설
보은군	1	10.00	16.70	0	0.00	1.14
옥천군	2	7.41	16.44	0	0.00	24.84
영동군	2	13.33	11.86	0	0.00	-8.16
진천군	3	7.14	11.64	1	50.00	16.09
괴산군	1	9.09	16.93	0	0.00	11.36
음성군	6	10.53	15.19	3	▶100.00	59.64
증평군	2	10.00	6.88	1	▶100.00	▶268.00
단양군	5	▶33.33	▶34.54	0	0.00	-2.06

1) ▶광역 내 최고 ▶광역 내 최저 2) 파란색 : 전국 상위 10%, 빨간색 : 전국 하위 10%

충남

● 부여군, 국공립 어린이집 0개소

충남의 국공립 시설 비중은 청양군 17.65%>금산군 16.13%>홍성군 12.20% 순으로 높았으며 아동 비중은 금산군 17.55%>서천군 15.93%>청양군 15.82% 순으로 높았으며 부여군이 국공립 시설이 0개로 가장 낮음.

충남은 16개 기초 자치단체 중 6곳이 전국 평균 5.32% 이상의 시설 비중을 9곳이 평균 이하의 시설 비중을 나타냄.

● 절반인 8곳의 시설 증가율 0%임에도 나머지 절반 지역의 높은 증가율로 인해서 평균 증가율은 최상위권

시설기준 증가율은 서천군>논산시>홍성군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각각 한 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기준 증가율은 서산시>서천군>태안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기존 국공립 시설 개소가 적음에 기인함.

또한 국공립 시설 0인 부여군을 포함하여 보령시, 서산시, 계룡시, 연기군, 청양군, 태안군의 시

설 증가분 역시 없음. 서산시의 경우 시설 증가분은 없었으나 기존에 정원 대비 현원 비중 즉 이용률이 45.05%에서 99%로 증가하여 아동 기준 증가율이 138.10%로 높게 나타남.

● **금산군·서천군·홍성군,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에서 전체 기초 자치단체 상위 10%에 속함**

이는 전체 어린이집 및 국공립 어린이집의 개소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중 및 증가율이 높게 평가된 결과임.

<표 16> 충남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및 증가율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국공립 증가율		
	시설수 (개소)	시설 비중 (%)	아동 비중 (%)	증가개소 (개소)	시설 기준 (%)	아동 기준 (%)
충남	64	3.32	5.64	9	16.36	21.71
천안시	9	1.46	3.21	1	12.50	20.04
공주시	6	6.90	11.96	1	20.00	9.03
보령시	4	6.67	9.49	0	0.00	-2.93
아산시	11	2.34	4.12	2	22.22	18.08
서산시	2	1.46	1.88	0	0.00	▶ 138.10
논산시	4	4.12	7.56	1	33.33	45.05
계룡시	1	2.22	3.87	0	0.00	14.58
금산군	5	16.13	▶ 17.55	1	25.00	46.06
연기군	3	3.95	9.24	0	0.00	2.78
부여군	0	0.00	0.00	0	0.00	0.00
서천군	3	11.11	15.93	1	▶ 50.00	77.39
청양군	3	▶ 17.65	15.82	0	0.00	5.00
홍성군	5	12.20	13.85	1	25.00	46.56
예산군	1	3.23	4.45	0	0.00	6.25
태안군	1	4.35	3.83	0	0.00	58.06
당진군	6	4.32	5.63	1	20.00	4.40

1) ▶ 광역 내 최고 ▷ 광역 내 최저 2) 파란색 : 전국 상위 10%, 빨간색 : 전국 하위 10%

전북

- **진안군 국공립 아동비중 30% 이상 공적 영역에서 제공, 임실군 국공립 어린이집 0개소**

전북의 국공립 시설 비중은 진안군·무주군 25.00%>장수군·순창군 20.00% 순으로 높았으며 아동비중은 진안군 31.26%>무주군 29.49%>장수군 27.17%의 순으로 높았으며 임실군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0개임.

전북 지역에서 시설 비중 30% 이상인 지역은 없으나 진안군이 아동비중 30% 이상으로 나타남. 또한 14개 기초 자치단체 중 7곳이 전국 평균 5.32% 이상의 시설 비중을 6곳이 평균 이하의 시설 비중을 나타냄.

- **절반 이상인 9곳의 시설 증가율 0%이며 나머지 5곳의 높은 증가율로 인해서 평균 증가율이 높아짐**

시설기준 증가율은 부안군이 1개소(현원 59명) 신설되었으며 전주시가 2개소 증가하여 40% 증가율을 보였으며 김제시 1개소 증가 33.33% 증가율, 군산시와 익산시가 1개소 증가 12.50%의 증가율을 나타냄.

반면, 국공립 시설 0개소인 임실군을 포함하여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9곳의 시설 증가분은 0임. 무주군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높으나 국공립 시설 증가율은 0인 반면, 정원 및 현원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아동수 기준 증가율이 50.89%로 나타남.

- **무주군,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에서 전체 기초 자치단체 상위 10%에 속함**

이는 전체 어린이집 및 국공립 어린이집의 개소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평가되고 시설 증가율 0임에도 아동 증가율이 50.89%로 높게 나타난 결과임.

- **남원시·임실군,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에서 전체 기초 자치단체 하위 10%에 속함**

<표 17> 전북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및 증가율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국공립 증가율		
	시설수 (개소)	시설 비중 (%)	아동 비중 (%)	증가개소 (개소)	시설 기준 (%)	아동 기준 (%)
전북	51	3.23	5.27	6	13.33	17.83
전주시	7	1.01	1.96	2	▶40.00	19.31
군산시	9	4.33	6.61	1	12.50	18.27
익산시	9	3.42	6.33	1	12.50	12.22
정읍시	6	5.77	7.05	0	0.00	9.42
남원시	1	1.30	1.47	0	0.00	4.88
김제시	4	6.06	10.56	1	33.33	43.40
완주군	4	6.06	7.02	0	0.00	1.46
진안군	2	▶25.00	▶31.26	0	0.00	-5.56
무주군	3	▶25.00	29.49	0	0.00	▶50.89
장수군	1	20.00	27.17	0	0.00	-4.03
임실군	0	0.00	0.00	0	0.00	0.00
순창군	3	20.00	15.24	0	0.00	28.95
고창군	1	4.00	3.76	0	0.00	2.27
부안군	1	3.57	5.82	1	신설	신설

1) ▶광역 내 최고 ▷광역 내 최저 2) 파란색 : 전국 상위 10%, 빨간색 : 전국 하위 10%

전남

- **신안군 국공립 시설비중 30%이상 보성군 아동비중 30% 이상 공적 영역에서 제공**

전남의 국공립 시설 비중은 신안군 38.46%>보성군 28.57%>장성군 20.00%의 순으로 높았으며 아동 비중은 보성군 34.25%>장성군 21.96%>신안군 21.67% 순으로 높았음. 전남 지역의 시설 비중 30% 이상인 지역은 신안군 1곳이며 아동비중 30% 이상인 지역은 보성군 1곳임.

- **담양군·곡성군·강진군·함평군 무려 4곳에 국공립 시설 0개소**

전남은 22개 기초 자치단체 중 13곳이 전국 평균 5.32% 이상의 시설 비중을 5곳이 평균 이하의 시설 비중을 나타냈으며 담양군, 곡성군, 강진군, 함평군 등 무려 4개 지역에 국공립 시설이 단 한곳도 없음.

- **절반 이상인 14곳의 시설 증가율 0, 나머지 지역에 신설 2개소를 포함한 높은 증가율로 인해서 평균 증가율 상위권**

최근 3년 간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개소는 순천시 3개소, 광양시, 장성군 2개소로 많았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증가분은 많지 않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 수가 작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이를 시설 기준 증가율로 평가하면 영암군 1개소(현원 34명), 영광군 1개소(현원 36명) 신설 외 장성군 200%>진도군 100%>무안군 50% 순으로 높았으며 아동기준 증가율 역시 장성군이 319.5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무안군 78.49%>진도군 37.25% 순으로 높음.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담양군, 곡성군, 강진군, 함평군을 포함하여 목포시, 나주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해남군, 완도군, 신안군 등 대부분 지역의 시설 증가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전남 지역의 평균 시설 기준 증가율 19.35%와 아동기준 증가율 14.97%는 전 지역의 고른 증가로 볼 수 없으며 몇몇 지역의 높은 증가율(전체 개소가 작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높음)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음.

광역별 공공성 평가에서는 2위의 높은 순위를 보인 반면 기초 자치단체 별로 살펴볼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단 한곳도 없는 지역이 4개나 있었으며 9개 지역이 3년 간 증가율이 0%에 그치는 등의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는 등 이들을 모두 종합하여 전남 지역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평가하면 지역 내 격차가 큼.

- **장성군·진도군,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에서 전체 기초 자치단체 상위 10%에 속함**

이는 전체 어린이집 및 국공립 어린이집의 개소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중 및 증가율이 높

계 평가된 결과임.

- 목포시·담양군·곡성군·화순군·강진군·함평군 무려 6곳이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에서 전체 기초 자치단체 하위 10%에 속함

<표 18> 전남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및 증가율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국공립 증가율		
	시설수 (개소)	시설 비중 (%)	아동 비중 (%)	증가개소 (개소)	시설 기준 (%)	아동 기준 (%)
전남	74	6.28	7.71	12	19.35	14.97
목포시	5	2.27	2.60	0	0.00%	-5.99
여수시	14	10.00	9.29	1	7.69	-0.26
순천시	12	5.22	8.56	3	33.33	30.12
나주시	7	14.89	18.67	0	0.00	-3.83
광양시	9	6.47	11.76	2	28.57	18.39
담양군	0	0.00	0.00	0	0.00	0.00
곡성군	0	0.00	0.00	0	0.00	0.00
구례군	1	9.09	14.95	0	0.00	3.90
고흥군	2	9.09	3.50	0	0.00	2.44
보성군	4	28.57	▶ 34.25	0	0.00	-4.40
화순군	1	1.33	2.01	0	0.00	-6.00
장흥군	1	5.56	9.90	0	0.00	16.67
강진군	0	0.00	0.00	0	0.00	0.00
해남군	1	3.13	2.98	0	0.00	11.63
영암군	1	2.70	1.77	1	신설	신설
무안군	3	5.36	8.49	1	50.00	78.49
함평군	0	0.00	0.00	0	0.00	0.00
영광군	1	5.56	2.84	1	신설	신설
장성군	3	20.00	21.96	2	▶ 200.00	▶ 319.57
완도군	2	8.33	7.07	0	0.00	-19.35
진도군	2	18.18	11.11%	1	100.00	37.25
신안군	5	▶ 38.46	21.67	0	0.00	-11.40

1) ▶광역 내 최고 ▷광역 내 최저 2) 파란색 : 전국 상위 10%, 빨간색 : 전국 하위 10%

경북

-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5곳 모두 국공립 시설 및 아동비중 모두 30% 이상 공적 영역에서 제공**

경북의 국공립 시설 비중은 영양군 60.00%>울릉군 50.00%>봉화군 36.36%의 순으로 높았으며 아동 비중은 울릉군이 81.82%>영양군63.30%>봉화군 42.74%의 순으로 높았으며 지역 내 시설 비중 및 아동 비중이 높은 곳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많은 편임.

경북 지역의 시설 비중 30% 이상인 지역은 영양군, 울릉군, 봉화군, 울진군, 영덕군, 고령군, 청송군 7곳이며 아동비중 30% 이상인 지역은 울릉군,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7곳으로 이 중 영양군, 울릉군, 봉화군, 울진군, 영덕군 5곳은 시설비중과 아동비중 모두 30%를 공적 영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음.

경북은 23개 기초 자치단체 중 15곳이 전국 평균 5.32% 이상의 시설 비중을 7곳이 평균 이하의 시설 비중을 나타냈으며 군위군은 국공립어린이집이 0개소로 나타나 경북 지역 역시 지역 내 격차가 존재함.

- **절반 이상인 15곳의 시설 증가율 0%이며 나머지 8곳의 높은 증가율로 인해서 평균 증가율이 높아짐**

최근 3년 간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개소는 경주시가 4개소(증가율 100%)로 가장 많았으며 예천군 2개소 증가, 상주시가 1개소 증가하여 역시 100%의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성주군, 칠곡군, 울진군, 울릉군 등 무려 15개 지역의 증가율이 0%에 불과하여 시설 기준 증가율에서 또한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아동 기준 증가율은 예천군>상주시>경주시의 순으로 나타남. 이들을 모두 종합하여 전남 지역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평가하면 예천군>울릉군>고령군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북 지역의 평균 시설 기준 증가율 11.01%와 아동기준 증가율 11.24% 역시 전 지역의 고른 증가가 아닌 몇몇 지역의 높은 증가율(전체 개소가 작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높음)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음.

이들을 모두 종합하여 전남 지역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평가하면 전국 상위 10%와 하위 10%인 지역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지역 내 격차가 존재함.

- 영양군·청도군·고령군·예천군·봉화군·울릉군 무려 6곳이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에서 전체 기초 자치단체 상위 10%에 속함

이는 전체 어린이집 및 국공립 어린이집의 개소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중 및 증가율이 높게 평가된 결과임.

- 포항시·군위군,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에서 전체 기초 자치단체 하위 10%에 속함

<표 20> 경북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및 증가율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국공립 증가율		
	시설수 (개소)	시설 비중 (%)	아동 비중 (%)	증가개소 (개소)	시설 기준 (%)	아동 기준 (%)
경북	121	5.43%	7.98%	12	11.01%	11.24%
포항시	13	2.07%	3.39%	1	8.33%	5.14%
경주시	8	3.48%	4.08%	4	100.00%	60.00%
김천시	5	3.94%	10.07%	0	0.00%	11.89%
안동시	10	10.64%	13.22%	0	0.00%	-0.40%
구미시	7	1.56%	4.21%	0	0.00%	12.09%
영주시	5	11.11%	10.65%	0	0.00%	6.00%
영천시	7	14.00%	11.16%	1	16.67%	6.19%
상주시	2	4.26%	3.69%	1	100.00%	83.33%
문경시	4	10.26%	12.14%	0	0.00%	18.75%
경산시	8	3.72%	4.57%	0	0.00%	16.89%
군위군	0	0.00%	0.00%	0	0.00%	0.00%
의성군	3	23.08%	16.55%	0	0.00%	23.23%
청송군	3	30.00%	29.30%	0	0.00%	-17.46%
영양군	3	60.00%	63.30%	0	0.00%	15.00%
영덕군	5	33.33%	34.19%	0	0.00%	-4.38%
청도군	4	25.00%	32.75%	1	33.33%	8.09%
고령군	6	31.58%	27.79%	1	20.00%	26.63%
성주군	5	23.81%	30.06%	0	0.00%	-2.84%
칠곡군	5	3.47%	4.51%	0	0.00%	26.01%
예천군	4	22.22%	14.71%	2	100.00%	84.72%
봉화군	4	36.36%	42.74%	1	33.33%	4.04%
울진군	9	36.00%	34.38%	0	0.00%	1.81%
울릉군	1	50.00%	81.82%	0	0.00%	39.66%

1) ▶ 광역 내 최고 ▷ 광역 내 최저 2) 파란색 : 전국 상위 10%, 빨간색 : 전국 하위 10%

경남

- **산청군·합천군, 국공립 아동비중 30% 이상 공적 영역에서 제공**

경남의 국공립 시설 비중은 산청군 29.41%>함양군 23.53%>합천군 21.43%의 순으로 높았으며 양산시 1.66%로 가장 낮음. 아동 비중은 산청군 41.28%>합천군 31.33%>함양군 27.55% 순으로 높았으며 밀양시가 1.85%로 가장 낮음.

경남에서 시설 비중 30% 이상인 지역은 없으나 아동 비중 30% 이상인 지역은 산청군, 합천군 2곳으로 나타남. 18개 기초 자치단체 중 10곳이 전국 평균 5.32% 이상의 시설 비중을 8곳이 평균 이하의 시설 비중을 나타내 지역 내 격차가 존재함.

- **시설 증가율 0인 곳은 7곳이며 나머지 지역의 높은 증가율로 인해서 평균 증가율은 상위권**

최근 3년 간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개소는 밀양시 1개소 증가, 남해군 1개소 증가, 함양군이 2개소 증가하여 100%의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등 무려 7개 지역의 증가율이 0%에 불과함. 이 중 고성군의 경우 시설기준 민간어린이집 25%, 가정어린이집은 무려 400% 증가했으며 의령군과 합천군은 가정어린이집이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었음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노력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음.

아동 기준 증가율은 밀양시>양산시>통영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기준 증가율에 비해서 아동 기준 증가율은 적게 나타났으며 이는 이들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률과 규모에 따른 결과임. 경남 역시 전 지역의 고른 국공립 비중과 증가율이 아닌 몇몇 지역의 높은 비중과 증가율(전체 개소가 작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높음)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남해군·산청군·함양군,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에서 전체 기초 자치단체 상위 10%에 속함**

이는 전체 어린이집 및 국공립 어린이집의 개소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중 및 증가율이 높게 평가된 결과임.

<표 20> 경남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및 증가율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국공립 증가율		
	시설수 (개소)	시설 비중 (%)	아동 비중 (%)	증가개소 (개소)	시설 기준 (%)	아동 기준 (%)
경남	131	3.78	8.88	17	14.91	16.85
창원시	35	3.23	9.15	2	6.06	17.47
진주시	14	4.22	8.68	1	7.69	7.62
통영시	8	7.48	13.31	3	60.00	47.27
사천시	7	5.00	10.07	2	40.00	39.38
김해시	21	2.25	7.07	1	5.00	13.40
밀양시	2	2.27	▶ 1.85	1	▶ 100.00	▶ 64.29
거제시	7	3.98	7.08	1	16.67	12.75
양산시	6	▶ 1.66	3.10	2	50.00	55.49
의령군	2	15.38	23.26	0	0.00	14.94
함안군	3	5.26	11.69	0	0.00	-5.76
창녕군	2	8.33	13.85	0	0.00	8.09
고성군	2	6.90	8.46	0	0.00	12.50
남해군	2	11.76	15.42	1	▶ 100.00	29.03
하동군	2	10.00	9.44	0	0.00	-4.17
산청군	5	▶ 29.41	▶ 41.28	1	25.00	10.23
함양군	4	23.53	27.55	2	▶ 100.00	26.79
거창군	6	17.65	18.86	0	0.00	3.70
합천군	3	21.43	31.33	0	0.00	-3.59

1) ▶ 광역 내 최고 ▷ 광역 내 최저 2) 파란색 : 전국 상위 10%, 빨간색 : 전국 하위 10%

제주

- 제주, 국공립 비중과 증가율에서 하위로 평가

서귀포가 시설 비중과 아동 비중 모두 제주시에 비해서 높았으며 시설 및 아동 기준 증가율은 제주시가 높음.

<표 21> 제주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및 증가율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국공립 증가율		
	시설수 (개소)	시설 비중 (%)	아동 비중 (%)	증가개소 (개소)	시설 기준 (%)	아동 기준 (%)
제주	21	3.71	5.22%	1	5.00	3.32
제주시	11	2.56	3.52	1	10.00	5.02
서귀포	10	7.35	10.51	0	0.00	1.62

소결(기초 자치단체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평가)

- 국공립 시설 비중 30% 이상인 기초 자치단체는 16곳으로 전체 7%에 불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설 비중이 30% 이상인 기초 자치단체는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옹진군·강화군, 강원 화천군·고성군·태백시, 충북 단양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울릉군·봉화군·울진군·영덕군·고령군·청송군 16곳으로 전체 230개 기초 자치단체의 7%에 불과함.

- 국공립 아동 비중 30% 이상인 기초 자치단체는 29곳으로 전체 12.61%에 불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아동 비중이 30% 이상인 기초 자치단체는 서울 종로구·중구·성동구·동작구·마포구·강남구, 부산 중구·동구·서구·영도구, 인천 강화군·옹진군, 강원 고성군·태백시·화천군·정선군·인제군, 충북 단양군, 전북 진안군, 전남 보성군, 경북 울릉군·영양군·봉화군·울진군·영덕군·청도군·성주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29곳으로 전체 230개 기초 자치단체의 12.61%에 불과함.

- 울산·광주·대전, 모든 기초 자치단체가 전국 평균 5.32% 이하 시설 비중

16개의 지자체 내에서 전국평균(5.32%)이상의 국공립 시설 비중은 상위 서울(100%)>충북(83%)>부산(75%)>강원(67%)>경북(65%)>전남(59%)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울산·광주·대전은 0%로 나타남. 즉, 서울의 경우 25개의 기초 자치단체가 모두 전국 평균 이상의 국공립 시설 비중을 갖고 있는 반면, 울산, 광주, 대전은 모든 기초 자치단체가 전국 평균 이하의 국공립 시설 비중을 나타냄.

- 충남 부여군, 전북 임실군, 전남 담양군·곡성군·강진군·함평군, 경북 군위군 국공립 시설 0

이들 지역의 0-5세 영유아는 전남 담양군(1,935명), 곡성군(1,323명), 강진군(2,442명), 함평군(1,485명), 경북 군위군(673명), 충남 부여군(2,995명), 전북 임실군(1,397명)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음.

- 국공립 시설 증가율 상위 지역은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

전북 부안군, 전남 영암군·영광군, 충북 청원군에 국공립 시설이 1개소 씩 신설되었으며 시설증가율은 전남 장성군 200%>경북 경주시·경남 남해군·경남 밀양시·경북 상주시·경북 예천군·충북 음성군·충북 증평군·전남 진도군·경남 함양군·강원 화천군 100% 임. 이들 지역은 국공립 시설 개소가 많이 않아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게 평가됨.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기준 증가율은 국공립 신설 지역을 제외하고 전남 장성군 319.57%>충북 증평군 268.00%>충남 서산시 138.10%>경기 오산시 103.06%>경기 남양주시 88.89%>경북 예천군 84.72%>경북 상주시 83.33%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2>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및 증가율 전국 상·하위 기초 자치단체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국공립 증가율				
	시설수 (개소)	시설 비중 (%)	아동 비중 (%)	증가개소 (개소)	시설 기준 (%)	아동 기준 (%)		
전국 상위	강원 화천군	6	30.00	39.14	3	100.00	81.56	
	인천 옹진군	3	37.50	41.32	1	50.00	75.00	
	전남 장성군	3	20.00	21.96	2	200.00	319.57	
전국 하위	충남 부여군	0	0.00	0.00	0	0.00	0.00	
	전북 임실군	0	0.00	0.00	0	0.00	0.00	
	전남	담양군	0	0.00	0.00	0	0.00	0.00
		곡성군	0	0.00	0.00	0	0.00	0.00
		강진군	0	0.00	0.00	0	0.00	0.00
	함평군	0	0.00	0.00	0	0.00	0.00	
	경북 군위군	0	0.00	0.00	0	0.00	0.00	
	광주 남구	2	1.47	3.23	0	0.00	-8.42	
	전남 화순군	1	1.33	2.01	0	0.00	-6.00	
	광주 북구	12	3.63	6.01	-1	-7.69	-1.10	
	대구 북구	5	1.39	1.34	0	0.00	-20.00	
	대전 중구	4	1.93	2.46	-1	-20.00	-14.74	
	광주 광산구	4	0.88	1.98	-1	-20.00	-12.68	

- 기초 자치단체별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상위 1위 강원 화천군, 2위 인천 옹진군, 3위 전남 장성군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과 최근 3년 간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과 최근 3년 간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가율을 종합하여 기초 자치단체별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평가하면, 전국 상위는 강원 화천군>인천 옹진군>전남 장성군의 순으로 나타남.

전국 하위는 국공립 시설이 단 한곳도 없는 충남 부여군, 전북 임실군, 전남 담양군·곡성군·강진군·함평군, 경북 군위군 7곳 외에 광주 남구>전남 화순군>광주 북구>대전 중구>광주 광산구의 순이었으며 이들 지역은 낮은 국공립 비중과 함께 국공립 시설 또는 아동수의 감소로 인해 전국 최하위권을 형성함.

결론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보육할 책임과 어린이집을 확보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보여 주는 주요한 지표임.

하지만 시설 비중 5.32%, 아동비중 10.91%의 국공립 비중과 시설기준 12.47% 아동기준 13.38% 수준임에도 최근 3년(2009년~2012년 3월) 간, 총 4,943개의 어린이집이 증가했으며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39개소(4.84%) 증가에 불과해 정부의 보육 서비스 공공성 제고 노력이 미약함을 알 수 있음. 외국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이 스웨덴 40~80%(연령에 따라), 덴마크 70%, 일본 53.4%, 독일 40%(시설수 기준), 노르웨이 47%(아동수 기준 58%) 등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임무 방기에 해당하는 수준임.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2000년 6.71%→2012년 3월 말 5.32%)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설립이 쉬운 가정어린이집이 급증(2000년 33.58%→2012년 3월 말 52.31%)하고 있어 재정적 측면에서의 공공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 측면에서의 공공성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 증가율(12.47%) 또한 가정어린이집 증가율(22.01%)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최근 3년 간 전체 어린이집 증가분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4.84%에 불과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 전략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이 있지 않는 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경제사회적 지위가 다른 아동에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할 수 있음. 보육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인 만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보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으며 영유아에 대한 미래투자라는 관점에서 보육서비스는 민간이나 영리영역보다는 공적 영역에서 담당해야 함. 따라서 민간의존도가 높은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정책이 필요함.

또한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집 근처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곳곳에 있는 것이 중요함. 또한 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가 있더라도 각 지역의 재정자립도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정부의 재정격차가 심한 상황에서는 이에 따른 지역별 보육서비스 격차를 최소화 하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이번 지방정부 보육시설 공공성 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도출됨.

- 각 자치단체는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의 영아 돌봄 비중을 늘려야 함. 영아를 시설 보육을 통해 돌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민간운영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하는 기능을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국공립 영아 보육 비중이 지나치게 낮음.
- 보육지원 확대에 의해 가정어린이집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야 함.
-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비롯한 충분한 준비 없이 보육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에 등록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따라서 비용지원을 중심으로 한 보육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고가 필요함.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국공립 증설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어린이집 신설을 비롯한 보육재정에 대한 국고 비중을 늘려야 함. [\[참\]](#)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6호

보육 공공성 실태 보고서

발 행 일 2012. 06. 19

발 행 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

담 당 김은정 간사 02-723-5356 welfar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2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ARS후원 060-800-5300

주 소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